나주 마한 유적지 인근 축사 악취…주민·관광객 고통

‘반남 고분군’ 100여m 거리 20년 이상 된 축사 즐비
축산 폐기물 산더미·무단 방류에 불법 증·개축도 빈번
나주시 문화재 일대 불법행위 근절 적극 행정 나서야

18일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의 옥수수밭에 축산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 곳은 사적 제513호인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9호분’(원 안)과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이다.

18일 나주시 반남면의 사적지 ‘신촌리 9호분’으로부터 불과 100여m 떨어진 옥수수밭에서는 농민이 트랙터를 끌고 소 배설물 등 축산폐기물을 밭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고 있었다. 축산폐기물 더미는 족히 2m를 넘었는데, 곳곳에 불태운 영농폐기물이 섞여있는지 타는 냄새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신촌리 9호분 인근의 다른 밭에서는 화전(火田)을 한 듯 밭 일대가 까만 재로 뒤덮여 있었다.

같은 날 ‘덕산리 5호분’ 인근은 200여m 떨어진 축사에서 퍼져 나온 소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다. 축사 주인 A씨는 “이 곳에서 30년동안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근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소 키우는 데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며 “축산 폐기물도 별도의 퇴비장에 모아 버리고 있으니 이 이상 농가 입장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마한시대 유물인 금동관 등 문화재가 잇따라 출토돼 ‘마한 유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분군 일대가 사적지로서 보호받고 있는데도 인근에 축사가 포진해 있어 상시 악취가 발생하고, 더구나 농장주들이 공공연히 축산폐기물을 무단 방류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고분군을 견학하러 온 외지 관광객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신고가 들어와야 조치할 수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덕산리, 대안리 등에 분포한 나주 반남 고분군은 마한시대 옹관과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 문화재가 출토된 곳으로, 지난 2011년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분이 있는 반남면 신촌리에는 9개소, 대안리에는 19개소, 덕산리에는 30개소의 축사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1989~1999년 사이 허가를 받고 20여년 넘게 운영하던 곳이라 나주시는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인근 축사에서 축산폐기물을 무단 방류해 사방에서 악취가 퍼지는데도 나주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매년 10여건씩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온도·습도가 올라가면 악취가 심해져 민원도 더 자주 접수되는데, 아직 올해는 행정처분 조건인 악취 희석배수 15배수를 넘은 적이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또 올해 사적지 인근 축산폐기물 무단배출로 행정조치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나주시는 무단배출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일일이 축사들을 돌며 배출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불법 축사 증·개축 건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는 단순한 가설건축물을 세우더라도 반드시 관할청에 신고하고 문화재 분포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조차 않고 불법 건축물을 세우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문화재 인근인데도 현상변경 신청조차 없이 건물을 증·개축하는 등 행위가 빈번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시골생활을 오래 했던 주민들이라 신고조차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계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 일대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남면 주민 B(65)씨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곳인데도 불법행위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는 바람에 관광객들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나주시가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최소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중환 전 나주시 마한사 공동위원장은 “현 상황은 문화재 복원도 제대로 못하고, 축산농가도 민원에 밤낮없이 시달리는 등 서로 불편한 상황이다”면서 “축산업자들에게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유적지도 관광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려면 나주시가 나서서 반남면 전체를 포괄하는 유적복원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수용
정부, 감호위탁시설 운용

법무부는 18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 사문화돼 있던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별도의 시설이 없어 이런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향후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 아래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월단체 “전두환 추징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5·18 단체와 정치인들이 1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두환 추징3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단체들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추징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공법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징 3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뿐 아니라 금전·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에도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가리킨다.

단체들은 “전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전씨는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전두환이 2021년 사망한 이후에도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이다”며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러온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히 심사·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무원노조 광주 서구지부 ‘근무하고 싶은 직장’ 설문서 드러난 불만 보니

민원인의자 권하지 않았다고 감점이라니

‘친절 모니터링’·‘소통 강화 야유회’ 등 불필요 답해

광주시 서구청이 민선 8기에 도입한 ‘내 곁의 구청장실’, ‘친절 모니터링’ 등 정책에 대해 서구청 공무원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주민·공무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정책이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구청장이 동을 방문해도 짜여진 각본대로만 질문한다”, “구청장 기쁨조도 아니고 동영상, 공연 준비는 왜 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잇따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가 동 행정복지센터 6급 이하 직원 2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설문 결과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직접 동을 방문하는 ‘내 곁의 구청장실’, 직원을 동원해 공연 및 홍보영상을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전제 218명 중 84%(183명)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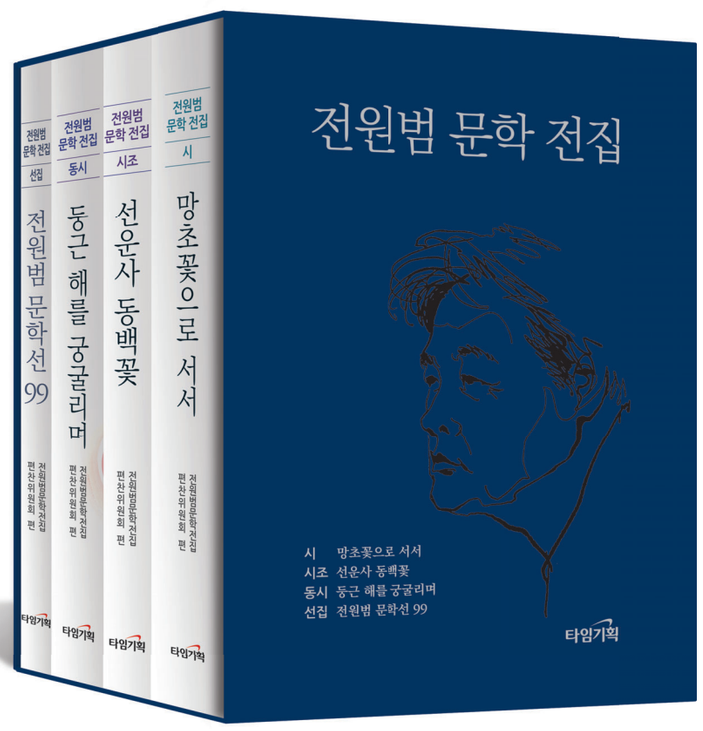
민원창구의 친절도를 향상하겠다며 도입한 ‘친절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는 61%(135명)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영어이름 부르기, 야유회 등 소통활동에 대해서도 80%(175명)가 ‘불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구청장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오글거리는 이벤트를 죽지 못해 했다”, “동 직원들에게 공연을 강요하는 식으로 갑질하지 말아 달라”, “의자를 권유하지 않아 감점을 당하고, 직원의 표정까지 평가당하고 있다”는 등 의견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서구청과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점은 확인했으며, 노조 또한 설문조사가 일부 과장된 점도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노조와 소통하며 직원 간 과도한 경쟁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떨고 떤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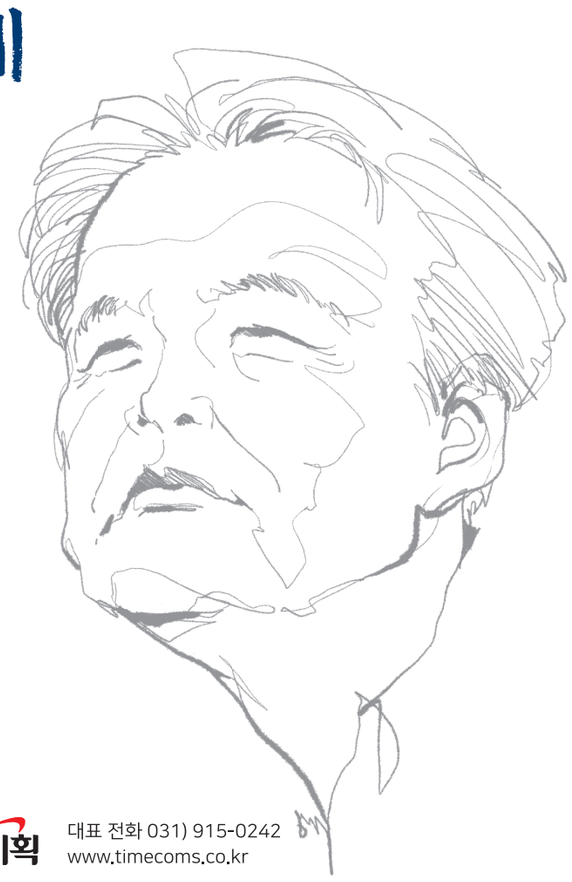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